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2. 15(목)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방진아 / 사무관 심정환 (Tel. 044-200-2058)
* 엠바고 : 즉시 사용 #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경찰청			

‘여성·서민생활·동네안전·교통안전’ 확실히 지킨다!

- 연말·연시 ‘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’, 가용인력 최대한 투입해 중점 추진키로
 - 황 권한대행, 美 금리인상에 “빈틈없는 대응, 중소기업·서민 지원 강화” 지시
-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5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‘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- * 참석자 : 경제·사회부총리, 외교·국방·행자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국무조정실장, 경찰청장 등
-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차 회의(12.12)에서 「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」을 논의한데 이어,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당면한 민생 현안인 치안과 서민금융대책을 보완·시행하기로 하였다.
- 우선,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, 연말·연시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「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」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첫째, 여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성안심구역(468개소)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‘귀갓길 안전’을 확보하고, 가정폭력·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.
 - 둘째,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길거리 강도·절도나 가택침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·단속하고, 다단계·유사수신 등 투자사기와 서민 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.

- 셋째, 동네안전을 지키기 위해 ‘생활주변폭력 전담팀’을 운영하여,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조폭과 주취자들에 의한 폭력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넷째,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·난폭·보복운전 등 ‘차량폭력’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.
- 황 권한대행은 “특히,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”을 강조하면서,
 - “가용한 경찰인력 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또한, 15일 새벽에 발표된 美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‘범정부 비상 경제대응 TF’(팀장 : 기재부 1차관)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 - 가계부채 구조 개선, 신용평가사 및 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.
 - 시중 금리가 인상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 (‘16년 5.7조원 → ‘17년 7조원) 공급을 확대하고,
 - 금리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(이자감면·상환유예 등)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황 권한대행은 “서민금융 대책들이 실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, 금융현장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·보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황 권한대행은 강원 산간 폭설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,
 - “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·점검을 강화하고, 폭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인근의 장비·인력이 신속하게 연계·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① '여성' 보호 강화

-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
 - * △범죄취약지역·시간대 가시적 순찰 강화 △여성불안신고 접수, 위험요인 제거
- 여성 귀갓길 대상 범죄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
 - * △성폭력·데이트폭력 등 집중단속 △여성안심구역(468개소) 순찰선 지정 등
- 가정폭력 강력 대응 및 학대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 - * △가정폭력 전담수사제 확대 △고위험 학대우려가정 방문·점검 실시

② 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

- 민생치안의 核인 강·절도(길거리·가택침입) 집중 단속,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
 - * △강력팀·생활범죄수사팀 투-트랙 전략 △장물유통경로 역추적, 피해회복 강화
- 투자사기(유사수신, 다단계), 불법채권추심 등 경제침해사범 단속
 - * △지방청 지수대, 경찰서 지능팀 중심 전담체제 구축 △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

③ 동네조폭·주폭 등 「생활주변 폭력」 근절

- 주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불량배(동네조폭, 소상인·서민 갈취 등) 및 주폭 등 강력 단속
 - 전 경찰서에 생활주변 폭력 전담수사체제 확립
 - * 생활주변폭력 전담팀 305개 1,427명
 - 입체적·종합적 수사로 상습·악질적 폭력행위에 강력 대응
- 출소 후 보복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
 - 피해자·수사팀 핫라인 구축, 맞춤형 신변보호제도로 피해자 보호 강화

④ 음주·보복·난폭운전 등 '차량폭력(車暴)' 척결

- 정기·수시 단속, 저녁·심야시간대(02~05시) 등 촘촘한 단속 실시
 - * △17개 지방청별 주 1회 이상 일제단속 △경찰서별 매일 심야시간대 이동식 단속 실시
- 암행순찰차, 이동식카메라 활용, 난폭·보복운전 집중 단속
 - * 11.21.부터 암행순찰차 야간단속 시범운영중, 결과분석 후 전국 고속도로 확대
-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, 공익신고 활성화
 - * '16년 11월말 기준 공익신고 접수건수 99만여건(전년동기 대비 77% 증가)